컷탈락 4인 '짝짓기' 지원 나서나

## 秋-鄭 제휴 등 '헤쳐모여' 분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권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컷탈락 4인이 본선후보 5명과 어떤 형태의 짝짓기를 통해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설지 관심이다.

일단 낙선후보 4인은 하나 같이 중립을 표방하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바닥조직에서는 '헤쳐모여' 흐름이 분주하다. 바닥조직의 이동은 결국 낙선후보의 의중과 맥이 닿아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주목된다.

민주당 출신으로 호남표 결집에 기대를 모아온 추미애 전 의원을 비롯, 천정배 의원, 김두관 전 행자장관 등은 그동안 손학규, 정동영 후보로부터, 친노주자였던 신기남 의원은 친노 진영으로부터 각각 영입 제안을 받아왔다.

우선 추 전 의원측과 정동영 후보간 제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추 전 의원 본인은 10일 캠프 해단식에서 "당내 경선에 관여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캠프 좌장을 맡았던 염동연 의원이 조만간 정동영 캠프에 합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해 자신이 당 의장을 할 당시 사무총장이던 염 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며, 염 의원은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 온 김두관 전 장관은 중립을 공개 선언했다.

신기남 의원측도 "친노단일화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일단 특정 후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두 후보 캠프의 경우 바닥조직에서는 이해찬, 유시민 후보 등 친노 후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세포분열이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각 캠프의 자체 분석이다. 컷오프에서 3위를 차지한 이 후보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부 감지된다는 얘기도 있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과 '개혁 블록'을 구축해 온 천정배 의원도 여전히 개혁을 고리로 문 전 사장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당분간 중립지대에 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 "내가 이명박 꺾을 경제대통령" 목청

### 신당 경선후보 경제정책 토론회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은 11일 오후 서울 상암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경제분야 정책토론회를 갖고 저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점을 내걸고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였다.

후보들은 이명박 후보의 '747'(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 공약이 부유층과 성장·개발주의 정책기조라고 비판하며 서민·중산층 보호와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둔 경제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모두발언에 나선 정동영 후보는 "(실직으로) 집에 앉아 있지 못하고 산에 오른 가장들의 아픈 심정을 이해한다"며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면 재기의 힘을 산이 아닌 나라와 정부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땅을 파서 대운하를 만들고 도곡동을 사고 파는 땅의 경제, 건물 임대업 경제"라며 "이해찬의 경제는 지식 기반과 한반도 평화의 경제며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한명숙 후보는 "서민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5%만 잘 사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로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전담기구를 꾸려 서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유시민 후보는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으며 서비스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로 1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후보는"손학규는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돌면서 74만개의 일자리 만든 열정이 있다"며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사람이 1,000건이나… 또 잡음

### 신당 주자 '대리접수' 신경전

### 마감시한 임박 접수 폭주

### 鄭-孫·친노 3인방 대립각

지난 10일 밤 서울 여의도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접수처에서 대리서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후보 캠프측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이 또 다시 선거인단 '대리접수' 논란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참여도가 높은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지역 선거인단 접수가 마감시한에 폭주한 가운데 10일 밤 일부지역 선거인단 접수 과정에서 한 여성이 무려 1천 건을 대리접수하는 '박스접수' 사례가 적발되고 일부 후보캠프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전날 '경선 룰' 합의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10%로 축소조정돼 선거인단 투표가 경선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선거인단 동원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리접수 논란은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선거인단 확보경쟁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정동영 후보와 상대적으로 조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손학규 후보 및 친노주자 3인방이 주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전날 '혼탁경선' 가능성을 경고했던 손학규 후보측은 전날의 대리접수 논란을 조직동원 선거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구태정치와 차별화된 새로운 정치의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손 후보측 전병헌 의원은 "'박스떼기'나 몸싸움 충돌 등 구태의연한 동원선거라는 낡은 방식이 재연됐다"며 "창당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낡은 방식이나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과감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친노주자인 이해찬 후보측은 박스접수 의혹의 진원지로 정동영 후보측을 지목하면서 날을 세웠다. 이 후보측의 한 관계자는 "어제 서류접수 마감시한이 지났는데도 정 후보측이 국경위 사무실에 들어가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명숙 후보측은 "동원경선의 구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유시민 후보측은 "신당의 경선과정은 한나라당과 달리 깨끗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후보측은 "접수처가 제한된 상태에서 마감시한에 쫓겨 선거인단 접수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 해프닝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부 후보측이 주장하는 대리접수 또는 대리서명 논란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측은 이어 "당에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국민경선위원회는 이같은 대리접수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기우 국경위 대변인은 "접수처가 제한돼있는 상황에서 선거참여도가 높은 광주·전남·부산·경남지역 선거인단 접수가 마감시한에 폭주한데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며 "그러나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만큼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15~16일 1·2차 경선후에나 가닥

### 친노 단일화 언제되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의 핵심 변수인 '친노'(親盧) 후보 단일화가 15~16일 실시되는 1·2차 경선 이후에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경선을 선두로 통과해 후보단일화의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이해찬 후보가 15일 경선(제주·울산) 이전에 단일화를 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수정, "언제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시민 후보도 15, 16일(강원·충북) 경선 결과를 보고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해찬-유시민 후보간 암묵적 공감대가 이뤄진 듯한 분위기다.

이 후보는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 "기본적으로 유 후보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 14일 이전에 하는 방법도 있고, 유 후보 얘기처럼 16일까지 경선을 하고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조금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도 해도 "경선을 두 차례 한 뒤 단일화를 하면 사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찍어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유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던 이 후보가 이처럼 변화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은 자신이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경선에서 3위를 차지, 한명숙 유시민 후보 보다 우위에 있음을 입증했고 15~16일 경선에서도 다른 친노 후보를 제칠 경우 자연스레 '이해찬 단일후보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한명숙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안을 제기해 왔으나 초반 경선을 치른 뒤 '이해찬 대세론'을 보여줄 경우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이해찬 단일화'로 직행할 수 있다는 계산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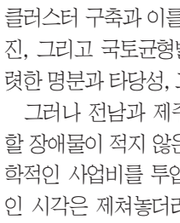
유 후보의 경우 이 후보의 셈범과는 다르지만 15·16일 경선에서 이른바 '유시민 바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단일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명숙 후보는 이 후보의 입장 선회로 당혹스러워 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해저터널, 공감대가 우선이다



홍행기
사회2부 차장

완도와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계획이 J프로젝트와 F1자동차대회에 이어 '전남의 운명을 좌우할' 또 하나의 대규모 현안사업으로 급부상하고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개인차원의 아이디어로 여겨졌던 이 사업이 2개월여 만에 국가적인 계획으로 공식화되는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도중 "여기서 말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다"며 이 계획을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해저터널은 그다지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박 지사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만나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공동 발표 및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공식 이슈로 등장했다.

전남도는 이어 13일 청와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 국가기간교통망 건설계획에 해저터널을 반영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으며, 여당과 야당에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국가 계획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완도와 보길도, 추자도를 거쳐 제주까지 109㎞를 18조 원을 들여 해상교량과 해저터널로 잇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은, 전남과 제주를 아우른 해양관광클러스터 구축과 이를 통한 J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명분과 타당성, 그리고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남과 제주가 '연륙'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18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하는 데 대한 일부의 회의적인 시각은 제쳐놓더라도, 전남과는 달리 제주에서는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지역 일부 렌터카 업체나 숙박업소, 음식점 등은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관광객들이 차를 몰고 제주에 와, 잠시 제주를 돌아본 뒤 저녁엔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렌터카업체나 음식·숙박업소들은 설 곳이 없어진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도에서 제주까지 승용차로 1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는 만큼 제주가 '하루 짜리'관광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제주지역 관광산업이 상당부분 붕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와 육지 간의 교통을 담당했던 항공사와 해운업체들도 해저터널에 다소간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분명 전남과 제주의 운명을 바꾸어놓을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같은 야심 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분이 생기고, 그 같은 갈등이 외부에 흘러나간다면 전체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전남과 제주 지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만이 해저터널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redplane@kwangju.co.kr